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김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2
----------	-----

발의연월일 : 2013. 9. .  
발 의 자 : 김정현·안병배 의원  
(찬성자 6인)

## 1. 주 문

2013년 7월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는 영종·운북동에 소재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난민법」에 의한 난민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의 이탈,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종도에 들어서려는 출입국지원센터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출입국지원센터의 난민지원시설 개청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난민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출한다.

하나, 수도권 신공항 촉진법에 근거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불법 전환하여 개칭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종도 난민 지원센터 예정부지 주변에는 농축산물 검역소, 공항경찰 특공대, 헬기장, 운북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난민지원센터 개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천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자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라.

## 2. 제안이유

영종 지역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나 당초 계획된 제3연륙교 건설은 요원한 상황으로 비싼 통행료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공사 중인 출입국지원센터 부지는 공항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지역으로 공항경찰 특공대와 운북 하수종말처리장, 농축산물 검역소, 특수견 훈련소 등이 입지한 외곽 지역으로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며, 당초 계획된 기반 시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 난민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음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출입국지원센터의 난민지원시설 개칭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난민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한다.

### 3. 결의안 이송처

가. 대한민국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광역시

### 4. 첨 부

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2013년 7월1일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법무부는 영종·운북동에 소재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울지방항공청에 출입국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허가 조건에는 출입국관리소 기능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연수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실시 계획을 제출하였을 뿐 난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의하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한 출입국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과 난민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난민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지원센터 개청과 관련하여 인천시장과의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미뤄볼 때 음성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시민들은 「난민법」에 의한 난민지원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시에도 불법 체류자들의 이탈,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

해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 난민의 폭동 등 폭력 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어 「난민법」을 수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려는 출입국지원센터는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영종 지역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 중인 곳으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나 당초 계획된 제3연륙교 건설은 요원한 상황이며, 비싼 통행료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계획된 기반 시설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의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 난민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음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난민의 인권과 지원을 위해서도 해당 지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출입국지원센터 부지는 공항 시설과 운영에 관련된 지역으로 공항경찰 특공대와 운북 하수종말처리장, 농축산물 검역소, 특수견 훈련소 등이 입지한 외곽 지역으로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다.

난민지원을 위한 예산 측면에서도 현재 법무부가 편성한 1인당 지원

금액을 59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수용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1인당 166만원으로 3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난민들도 수용 방식을 선호하지 않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출입국 지원센터의 난민지원시설 개청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난민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출한다.

하나, 수도권 신공항 촉진법에 근거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 센터로 불법 전환하여 개청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예정부지 주변에는 농축산물 검역소, 공항경찰 특공대, 헬기장, 운북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난민지원센터 개청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천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자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라.

2013년 9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